

저출산과 아동복지의 업그레이드

글 김차윤근(한국복지재단 명예회장)



필자는 우리나라 인구문제 시책에 있어서 지난 50년을 전후하여 서로 상반되는 양극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1960년대 초 정부는 경제개발의 일환으로 인구증가 억제책을 가족계획이란 이름으로 실천하였다. 사실상 그 당시 세계의 인구증가는 폭발적이었으며 이를 막지 않으면 자원부족과 환경오염으로 인류의 종말이 올 듯했다. 우리 한국도 필자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삼천리 강산에 2천만 동포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남북한이 합한 총 인구는 7천만이 되었다. 같은 영토 안에서 지난 70년간 실로 3.5배의 인구가 늘어난 셈이다.

우리는 지금 청명한 하늘을 보기 힘들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을 즐길 수 없다. 대기, 토양, 하천과 바다가 오염되고 지구는 서서히 온난화되어 각종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있다. 삼라만상의 수많은 생물들은 심한 공해로 이미 많이 사라졌고 지금도 서서히 없어지고 있다. 이러한 재앙이 인간에게도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인구문제는 영원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지만 인구폭발을 염려하던 때가 바로 어제의 일인데 오늘은 인구감소가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숫자적으로 우리나라의 여성 1인당 출산수인 합계출산율(TFR-Total Fertility Rate)이 1960년에 6에서 1.08로 떨어졌다. 우리나라가 현인구수를 유지하려면 TFR이 2.1명이 되어야 한다. 일본의 TFR이 지금대로 계속 떨어지면 서기 2100년에는 현재 인구의 반인 6천만 명으로 줄고 다시 서기 2500년에는 불과 16만 명이 남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국은 더 심각하다. 현재의 TFR이 계속 하강하면 매년 70만의 인구가 줄고 30년 후에는 2,173만 명이 준다는 계산이다. 작년도 8월에 동아일보에서는 앞으로 950년 후에는 한국민족이 이 지구 위에서 사라진다고 했다. 이는 참으로 실감나지 않는 무서운 충격이다.

정부는 많은 논란 끝에 1996년부터 인구증가 억제책을 폐지하고 2000년부터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6월 7일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현재의 TFR 1.16명을 2020년에 OECD의 평균치인 1.6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우선 첫 5년간 투자할 예산이 18조원을 넘는다.

이 발표에 대한 언론의 해석은 비판적이다. “저출산 재원 19조, 어떻게 만드나” “재원 뻔한데… 각 부처의 기존 대책 총집합” “이 정도 내놓고… 아이를 더 낳으라니” “결국 세금 더 걷겠다는 저출산 정책이냐” 등의 비판적 머릿기사가 실렸다. 필자도 이 기획의 실천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한때 인구증가 억제정책에는 국민의 호응이 좋았으나 이제 출산율을 높이자는 데에는 그렇지 않다. 아무리 아이를 더 낳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서비스를 정부가 준비하여도 젊은 층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는 그동안 극심한 사회변동과 아동보육 및 교육의 어려움,

가정과 자녀를 보는 여성의 가치관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를 더 낳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가치관이 회복되어야 하며 그러기까지 긴 세월이 필요하다.

정부는 앞으로 아이를 낳으면 무슨 무슨 도움을 주겠다고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출생한 아동들의 복지를 최대한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아동복지사업에는 영아원, 육아원 등의 시설복지, 장애아복지, 학령 전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사업, 국내외입양사업, 아동학대예방,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사업, 가정위탁보호사업, 그룹홈의 운영, 소년소녀 가장과 요보호아동을 위한 가정복지사업 등이 있다. 또 이러한 사업을 돕기 위한 민간자원 동원으로 불우아동 결연사업 및 불우이웃돕기 공동모금 등이 있다. 이 사업들의 일부와 아동복지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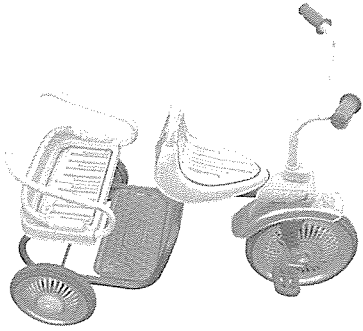
■ 시설복지

1975년 CCF(Christian Children's Fund ; 현 한국복지재단)에 취임했을 때 어느 원장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영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대개 지능이 낮다”고 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한다. 당시 영아원의 상황은 아동 수는 많은데 이들을 돕는 보육사의 수는 극히 적었다. 이들은 하루에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고 닦아주는 물리적 일에 여념이 없었다.

이들 영아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와 같은 사랑을 주는 것이다. 이들은 젖을 먹을 때에 어머니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비벼대는 소위 스킨십이 부족하다. 이는 모자간의 애정 나눔이며 영아 정서발달에 크게 도움이 된다. 가정에서는 어머니와 아이가 1:1로 단둘이 대화를 나누지만 영아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 지능개발이 늦어진다면 이러한 요소는 육아원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육아원 출신 아동은 평균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자란 아동에 비하여 사회 진출이 늦다고 한다. 시설 아이들은 소위





‘시설병(hospitalism)’에 걸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원인은 영아원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필자가 CCF에 왔을 때 본 육아원의 현실과 그 후 20년이 지나 CCF를 떠날 때 본 육아원의 현실은 눈부시게 향상되었다. 또 그 후 10년이 지난 오늘의 육아원은 더욱 발전했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의 욕구는 끝이 없기 때문에 운영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제 정부는 저출산에 쓰는 예산의 일부를 시설운영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우선 직원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며 시설을 확장하여 삶의 공간을 넓히고 아이들이 받는 사랑과 교육 등 모든 대우가 일반 가정의 아동과 차이가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국내 입양과 해외입양

매년 2,200~2,300명이 해외로 입양되는데 그들의 많은 부분이 장애를 갖고 있다. 그리고 국내 입양이 1,500~1,600명이다.

열린우리당의 어느 여성 의원은 해외입양 금지법을 발의하고 있는데 아직 당론으로는 결정되지 않고 있으나 관계자들 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국내 입양의 활성화가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자신의 아이도 낳지 않으려는 시대에 남의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일이다. 해외입양을 금지한다면 매년 해외로 입양 가는 장애아를 포함한 2,200~2,300명을 정부가 인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준비도 없이 나라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며 해외로 입양 가는 아동들의 장래를 유린하는 것이다. 이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못하면서 부모가 양로원에 가는 것을 자기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것과 같다. 정부는 많은 예산을 들여 국내 입양가정에 충분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 미혼모 문제

미혼모의 수는 더 늘지 않고 있다. 다만 그 연령층이 젊어지고 있을 뿐이다. 성교육과 피임약의

개발은 임신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간 임신중절이 35만 건이며 그 중 42%가 미혼모임을 감안할 때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꼭 결혼을 해 아이를 낳게 되어 있지만 유럽,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그렇지 않다. 2002년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 거의 절반이 결혼 외 결합커플에서 나왔다. 이들에게는 아무런 사회적 차이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임신중절은 모자보건법의 낙태를 허용하는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될 수 있는 대로 이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출산을 염려하는 이 시대에 연간 35만 건의 임신중절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

■ 혼혈아에 대한 인식의 개선

이제 한 나라에 있어서 단일민족이란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 한때 독일의 게르만(German) 민족, 일본의 아마도(大和) 민족 등등의 주장은 오직 침략 전쟁에 국민을 끌어들이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백의민족이니 단일민족이니 하며 자랑하듯 하였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 시골에서는 2만 명의 남자가 외국여자와 결혼하여 1만 명의 혼혈 아이를 기르고 있다. 또 6.25 전쟁 이후 수많은 혼혈아가 혼혈이란 이름으로 정상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소중한 인적자원이다.

■ 기타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가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 때문이라면 노인문제는 노인 문제대로 접근하는 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 또한 저출산 문제가 노동력 부족의 원인이기 때문이라면 외국 노무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0만의 외국 노동자가 있으며 이들이 우리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 있다. 이들은 소위 3D(Dirty, Dangererous, Difficult)업종이라고 하는 우리 노무자가 기피하는 일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80%가 불법체류자라는 것이다. 고용주는 이 약점을 이용하여 임금지불, 산업재해 그리고 인권 등을 소홀히 하여 국내·외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80%의 불법체류자는 대개 처음에는 정식 입국자였으며 체류기간을 넘기고도 귀국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여기에는 정부도 책임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 노무자와 같이 대우하는 제도를 수립하여 일시동인(universality)의 사랑을 주는 선진국다운 슬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